

여가·교육·돌봄 모두 도보 30분 ‘서울형 보행일상권’ 실현 첫걸음

서울시, 정릉·홍제·양재 등 8곳
‘보행일상권’ 시범대상지 선정
9월까지 조성계획 기준 마련

서울시가 시민들이 도보 30분 내에서 생활편의, 여가, 돌봄, 학습,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형 보행일상권’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서울시는 22일 서울 곳곳을 도보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자족적인 생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 정릉·홍제·양재 등 8개 ‘보행일상권’ 시범대상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행일상권’은 미래공간전략 지난 2022년 3월 발표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처음 제시된 것으로 팬데믹·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주거지의 일상 중심공간 부상 등 생활양식을 반영한 도시공간 개념이다.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주거지 인근에서 다양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자족적 생활권을 의미한다.

이번 시범사업 추진 기준이 될 대상

지는 ▲평창·부암(종로구) ▲금호·옥수(성동구) ▲청량리(동대문구) ▲신길(영등포구) ▲정릉(성북구) ▲수유(강북구) ▲홍제(서대문구) ▲양재(서초구) 등이다.

서울시는 보행일상권 실현을 위한 계획 마련에 초점을 두고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역세권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한 보행일상권 조성 계획 ▲보행일상권 내 필수시설의 확충 계획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생활가로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9월까지 ‘보행일상권 조성계획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서울 전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기반으로 서울시는 지난 2023년부터 용역을 시행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보행일상권 개념을 국내외 n분도시 이론을 바탕으로 구체화하고, 7개 분야 40여 개의 보행일상권 필수시설을 도출했다. 해당 시설엔 생활편의, 공공·의료, 여가, 돌봄시설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지별 보행일상권 필수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시설 확충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공급 방안과 관련, 공공시설의 경우 기부채납이나 공공기금 등을 활용하고, 민간시설은 지구단위계획 내 권장 용도로 유도하는 방안 등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울시민의 차별화된 ‘서울형 보행일상권’ 모델을 정립하고,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역세권사업 등의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시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근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형 보행일상권을 전면 도입하기에 앞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앞으로 서울 전역에 100개 이상의 ‘작지만 강한’ 자족형 생활권을 순차적으로 조성해,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공공기관 일자리정책 추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교통공 ‘일자리정책’ 행한부장관 표창

작년 정원 34% 청년층 신규고용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공공기관 일자리정책 추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로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1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청년고용, 인턴제 운영 등 일자리정책 추진 성과를 평가해 우수기관에 수여되었으며, 각 분야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지방공공기관 15곳이 선정됐다.

공사는 2024년 기준 정원 중 33.7%를 청년층으로 신규 고용했다. 이는

전국 지방공기업 평균(8.3%)의 4배 이상 높은 수치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선도적인 노력이 높게 평가받았다.

공사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직무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하고, 신입 직원에 대하여 응시 자격 제한이 없는 열린 채용을 시행하는 등 청년 고용 정책을 적극 운영 중이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경기교통공사는 지방공공기관으로서 고용책임을 다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일터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교대 선발인원 498명 감소… 수시 ‘세분화’

2026학년도 총 모집정원 3711명
수시 2524명, 전년비 150명 줄어

2026학년도 초·중·고등학교(교대) 입시는 전체 모집정원 3711명으로, 전년도보다 498명이 감소했다. 올해 교대 입시는 수시 전형 방식이 세분화된 한편, 일부 대학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한 것이 특징이다.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인원은 2524명으로 전년도보다 150명이 감소했다. 전체 수시 선발 인원 중 학생부종합전형이 2227명으로 전체 88.2%를 차지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11.8%에 해당하는 297명에 불과하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대다수 대학이 1단계 서류 평가 후 2단계 면접을 실시

하는 단계별 전형을 기본으로 선발하지만, 공주고대, 이화여대, 춘천교대 등 일부 대학은 면접을 생략하고 서류 100%로 선발한다. 광주교대는 올해 일부 전형에서 단계별 전형 대신 지원자 전원 비대면 면접을 실시하는 일괄합산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교대 수시 경쟁률은 5.95대 1로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교대에 대한 선호도가 하락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경인교대, 광주교대, 서울교대, 이화여대, 제주대, 한국교원대에서만 실시된다. 교과 성적 외에도 서류나 면접을 병행하는 경우

가 많다. 서울교대 학교장추천전형은 1단계 교과 100%, 2단계 면접 20%를 반영하며, 경인교대도 면접을 병행한다. 광주교대는 면접 대신 학생부 내용을 20% 반영한다.

이화여대와 제주대는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해 지원자의 부담이 적은 가운데, 이화여대는 수능 2개 영역 합 5이내, 제주대는 3개 영역 합 8이내라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는 다수 교대에서 수능최저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경인교대 학교장추천전형은 기존 ‘4개 합 12등급 이내’에서 ‘14등급 이내’로, 춘천교대 교직적·인성인재전형은 ‘4개 합 12등급’에서 ‘3개 합 9등급’으로 완화됐다.

/이현진 기자

교기원, 오늘 교양교육 혁신모델 설명회

전국 197개 회원대학 대상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이하 대교협)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하 교기원)은 23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대강당에서 전국 197개 회원대학을 대상으로 ‘전공자율선택제

안착과 기초학문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혁신모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양교육 혁신모델은 총 3가지 모델로 구성돼 있다. ▲기초학문 강화 모델(모델1): 기초학문 분야 전공의 모든 교과목 중 교양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

과목을 교양 교과목으로 이수 ▲자유학에 확장 모델(모델2): 기초학문 분야 전공 교과목 중 교양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교과목을 교양교육 과정에 개설 ▲자유학에 교육(LAE, Liberal Arts Education) 모델(모델3) 전공자율선택제 1유형 입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에 교육을 구현 등이다.

/이현진 기자

교육부, 디지털 성폭력 SOS 가이드 발간

딥페이크 성범죄 등 위험서 학생보호
피해 발생시 신속·정확 대응 일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학교 디지털 성폭력 초기 대응을 위한 ‘디지털 성폭력 에스오에스(SOS) 가이드(5종)’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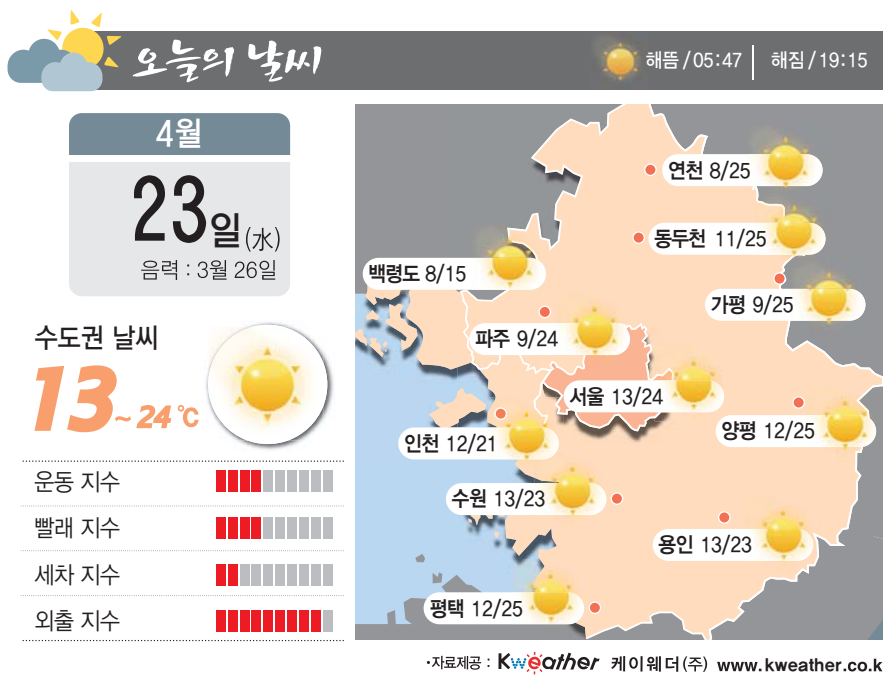
‘디지털 성폭력 SOS 가이드’는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학교 구성원이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11월 발표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안내서는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 유형과 디지털 성폭

력 발생 시 학생·교사·학부 등 학교 구성원의 상황별 대응방법과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예방을 위한 수칙 등을 담고 있다. 대상별로 이해를 돕기 위해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대학생용 등 학생용 3종, 교사용, 학부모(양육자)용으로 제작됐다.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대응 요령뿐만 아니라 친구나 제3자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의 올바른 주변인 역할도 안내하고 있으며, 가해행동을 했을 시 잘못된 행위에 책임지는 자세와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자녀 혹은 학생이 피해를 입거나 가해행동을 한 상황에서 학부모·교사의 적절한 대처 방안과 자녀·학생과 함께하는 예방 수칙도 안내됐다.

/이현진 기자



▲금 선물 3500달러 돌파…트럼프-파월 갈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국가애도기간·에펠탑 소등…전 세계 추모물결
/사진 뉴시스

▲포브스 회장 “트럼프 관세 영향 美 경제, 1970년대 인플레이션 불러올 것”
▲한일 국교정상화 60년…261년 만에 ‘조선통신사’ 뱃길 열린다

▲‘바티칸 수교국’ 대만, 깊은 애도…조기계양·특사파견
▲사우디에 K-스마트팜 시범온실 착공…중동 첫 수출 거점 조성